

보건복지 제470호 (2026-11)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7. 21. ISSN 2092-7117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¹⁾

최혜진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 이 글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보육·교육 기관 폐원이 생활권 단위의 보육 공백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100m 격자 인구 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좌표, 도로망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차량 생활권 기준 유일커버시율을 다수 산출하였음. 이들 시설이 폐원할 경우 인근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인구 감소 지역 시설 운영자와 부모 면담 결과 시설은 장거리 차량 운행, 고정비·인건비 부담, 교사 채용난을 겪고 있었고, 부모는 장거리 통원, 교통비, 아동의 피로, 선택권 약화 등 이용 제약을 부담하고 있었음.
- 향후 보육정책은 시설 공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육 접근권 제도와, 접근성 취약지수 기반 재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01. 보육 공백, 왜 새롭게 보아야 하는가

◆ 저출생과 영유아 인구 감소가 보육·교육 기관²⁾의 폐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보육 공백은 더 이상 시장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권 문제로 다뤄져야 함.

-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 이 글은 최혜진, 손재선, 김지민. (2025).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함.

2) 보육·교육 기관은 분석 대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지칭함. 보육서비스 접근권은 영유아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일상적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함. 이 글에서는 제도적 논의 맥락에서 이 표현을 사용함.

- 서울시의 경우 2018~2023년 6년간 어린이집 2157곳(전체의 26%)이 폐원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23), 일부 생활권에서는 단 하나 남은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곧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음(김보현, 2020; 박영서, 진광찬, 2021).
- 기존 보육정책은 ‘공급 확대’와 ‘취약지역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 「영유아보육법」(2023)은 국가·지자체의 보육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시적 청구권, 지자체의 배치 의무, 미이행 시 구제 수단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독일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아동의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지자체의 이행 의무와 구제 수단을 제도화하고 있음.

◆ 이 글은 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지역 내 보육·교육 기관의 수요·공급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이자 생활권 필수 인프라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영유아 인구 감소의 공간적 양상, 유일커버시설의 분포, 현장의 운영 부담과 이용 제약을 토대로 생활권 기반 보육 접근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글은 ① 영유아 인구 감소의 공간적 양상, ② 유일커버시설의 분포, ③ 인구 감소 지역 시설 운영자와 부모 면담 결과를 제시한 후 생활권 기반 보육 접근권 보장 방안을 제시함.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방법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02. 영유아 거주 공간의 수축과 지역적 분화

◆ 전국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영유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의 범위와 밀도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³⁾

- 먼저 영유아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 영유아 수는 2016년 약 267만 명에서 2024년 약 183만 명으로 31%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잠재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전체 영유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영유아가 1명 이상 거주하는 100m 격자의 총면적은 2016년 약 2588km²에서 2024년 약 1992km²로 23% 감소하였으며, 100m 격자별 평균 영유아 수도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음.
- 2016~2020년 11%였던 영유아 거주 면적 감소율은 2020~2024년 13%로 확대되었는데, 공간 축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격자별 영유아 수의 표준편차도 20.64명에서 15.47명으로 감소하여 일부 지역만의 급격한 감소라기보다 전국적으로 영유아 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3) 영유아 인구는 국토지리정보원 100m 격자 자료(2016·2020·2024년)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이때 영유아 연령은 1~6세임. 세부 사항은 부록 참조.

◆ **공간 수축의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수도권 · 광역시 중심의 광역적 저밀화와 도 단위 지역 중심의 수축 속 집중화가 대비됨(그림 1 A).**

- 수도권·광역시는 영유아 거주 면적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밀집도 감소폭이 큼. 즉 특정 외곽 지역에서만 영유아가 사라진다고보다 도시 전역에 걸쳐 영유아 밀도가 떨어지는 ‘광역적 저밀화’가 두드러짐.
- 도 지역은 영유아 거주 면적이 크게 축소되는 반면 남아 있는 거주 격자의 밀집도 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이는 외곽 격자에서 영유아가 사라지는 동시에 읍내·시내 또는 신도시성 거점 등 일부 공간에 영유아 수요가 상대적으로 잔존하거나 집중되는 ‘수축 속 집중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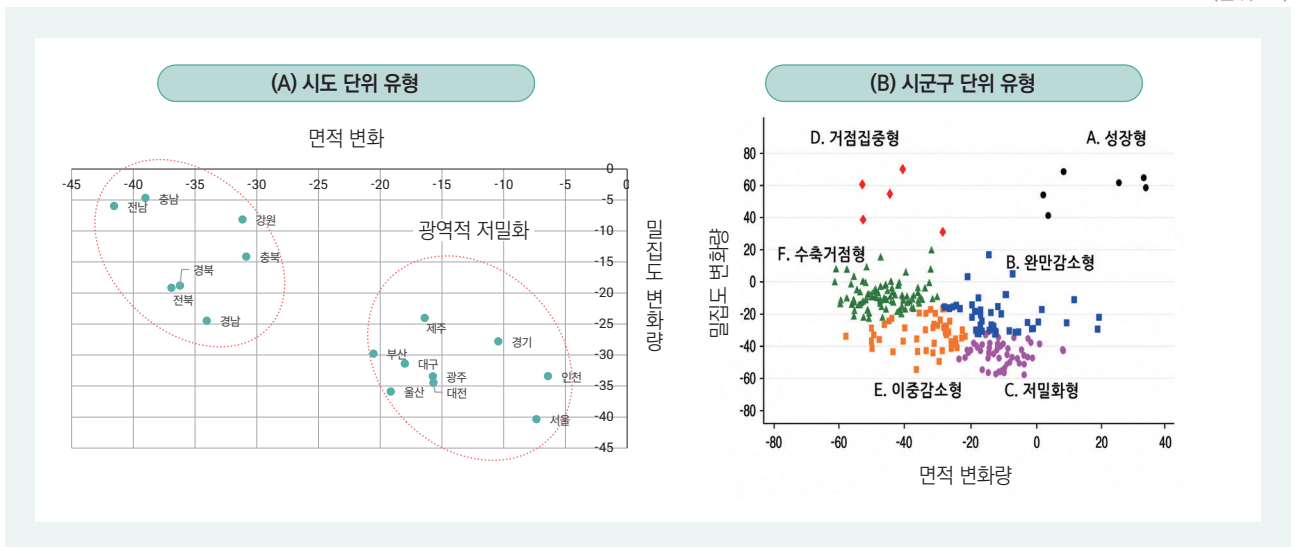
◆ **이러한 변화는 보육서비스 접근성 취약성이 더 이상 농어촌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소도시 · 도심외곽 · 구도심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영유아 수 감소와 거주 공간 축소는 보육·교육 기관의 폐원 위기 압력을 높이고, 남아 있는 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보육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설이 폐원할 경우 인근 다른 시설이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고, 해당 시설이 사실상 지역 내 유일한 보육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단순히 영유아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영유아가 어디에 남아 있고, 어떤 공간에서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영유아 거주 면적과 밀집도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하여 전국 252개 시군구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그림 1 B 및 표 1).
 - 이 분석은 단순히 영유아 수 감소 규모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영유아 거주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축소·재편되는지를 유형화함으로써 보육 공백 위험의 공간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군집분석 결과 전국 시군구는 성장형, 완만감소형, 저밀화형, 거점집중형, 수축거점형, 이중감소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됨.
 - 성장형(6개): 전국적인 감소 흐름과 달리 영유아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증가한 지역임. 행정·연구단지 입지나 신규 아파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남.
 - 완만감소형(49개): 영유아 거주 면적은 비교적 유지되나 밀집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유형임. 광역시 인근 지역이나 중형 거점도시가 주로 해당됨.
 - 저밀화형(54개): 영유아 거주 면적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밀집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유형임. 대도시 내 성숙·노후 생활권이 주를 이루며, 기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로 영유아 밀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임.
 - 거점집중형(6개): 영유아 거주 면적은 급감하지만, 일부 거점의 밀집도는 증가하는 유형임. 재개발, 혁신도시 조성, 도청 이전 등으로 영유아 수요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남.
 - 수축거점형(90개): 영유아 거주 면적은 크게 줄어들지만, 남아 있는 거점의 밀집도 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유형임. 외곽과 읍면 지역은 비어가되 읍내·시내 소규모 거점에 영유아가 잔존하는 구조로, 인구 감소 지역이 다수 포함됨.

- 이중감소형(47개): 영유아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감소하는 유형임. 원도심, 산업도시 배후지, 도농복합도시가 주로 해당되는데, 거점 기능 자체가 약화되어 보육·교육 기관 폐원과 접근성 악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유형임.
- 종합하면 수도권·광역시에서는 저밀화형과 완만감소형이 주로 나타남. 도 단위 지역에서는 수축거점형과 이중감소형이 다수를 차지함. 이는 영유아 감소가 전국 공통의 현상이지만, 그 공간적 결과는 지역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보육 공백에 대한 정책 대응도 지역별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함.

[그림 1] 시도 및 시군구별 영유아 감소 유형(2016~2024)

(단위: %)



주: 2016년 대비 2024년까지의 변화량임. X축은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 Y축은 영유아 거주 밀집도 변화율을 의미함. A는 시도 단위 유형, B는 시군구 단위 군집분석 결과임.

출처: “국토통계지도: 유아 인구수(전체) 100m 격자”[데이터셋],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시군구 유형별 영유아 거주 공간 변화 기술통계(2016~2024)

(단위: %)

유형	시군구 수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량		영유아 거주 밀집도 변화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성장형	6	18.99	14.25	57.45	9.61
B.완만감소형	49	-9.48	10.41	-20.08	11.10
C.저밀화형	54	-8.48	6.69	-43.72	6.44
D.거점집중형	6	-41.94	9.11	58.79	24.81
E.이중감소형	47	-31.28	8.88	-31.88	8.37
F.수축거점형	90	-43.42	7.49	-8.31	7.93
전체	252	-25.55	18.91	-19.42	23.86

출처: “국토통계지도: 유아 인구수(전체) 100m 격자”[데이터셋],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03. 유일커버시설: 폐원 시 즉각 공백이 발생하는 거점

◆ 폐원 시 곧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커버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보육 거점을 식별함.

- 유일커버시설은 특정 100m 격자의 영유아가 단 하나의 시설 서비스권에만 포함되어 해당 시설이 폐원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함.
 - 유일커버시설은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정 서비스권 안에 시설은 있으나 대체 가능한 시설이 사실상 한 곳뿐인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서비스권 내 시설이 전혀 없는 무시설 지역은 별도의 보육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의료 분야에서 단독지역거점병원(Sole Community Hospital)을 지정·지원하는 논리와 유사한 접근으로, 이 연구는 이 개념을 보육 분야에 적용함.
- 서비스권 거리 기준은 750m, 1.5km, 5km, 10km를 적용하되 본문에서는 정책적 변별력이 큰 5km와 10km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함. 세부 분석 절차는 부록 참조.

◆ <표 2>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시설 기준 유일커버시설은 KTDB 도로망에서 차량 5km 1245개, 10km 285개, T map 도로망에서 차량 5km 1156개, 10km 317개로 나타남.

- 도보권(750m·1.5km)에서는 시설별 서비스권이 좁아 유일성이 광범위하게 포착되어 정책적 변별력이 낮은 반면 차량 생활권(5km·10km)에서는 도시 내부의 유일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산간·도서·농촌 등 공급 자체가 희박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KTDB는 국가교통DB 기반의 표준 도로망 자료이고, T map은 민간 내비게이션 기반의 실제 경로 탐색 자료이므로 도로망 구축 방식, 시설 좌표의 도로망 매칭 방식,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따라 서비스권 산출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두 자료의 차이는 특정 자료의 오류라기보다 접근성 산출 결과의 민감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어린이집만을 기준으로 보면 T map 기준 유일커버시설은 차량 5km 946개, 10km 442개로 확인됨. 유치원이 영아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기준의 취약성은 영아(0~2세)의 접근성이 더 취약함을 보여 줌.

〈표 2〉 서비스권 거리 임계값에 따른 유일커버시설

(단위: 개, %)

구분	KTDB	T map	
	어린이집+유치원(전체 시설)	전체 시설	어린이집
서비스권 거리 750m	5,891(16.3)	-	-
서비스권 거리 1.5km	2,901(8.0)	2,812(7.8)	-
서비스권 거리 5km	1,245(3.4)	1,156(3.2)	946(3.4)
서비스권 거리 10km	285(0.8)	317(0.9)	442(1.6)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36,299	36,299	27,989

주: KTDB는 국가교통DB 기반의 표준 도로망 자료이며, T map은 민간 내비게이션 기반의 실제 경로 탐색 자료임. 두 자료는 도로망 구축 방식, 시설 좌표의 도로망 매칭 방식,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서로 달라 동일한 시설 목록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권 거리별 영유아 수가 일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이 표의 차이는 특정 자료의 오류라기보다 네트워크 자료 선택에 따른 접근성 산출 결과의 민감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보육정보공개 API: OPEN API 상세(어린이집 DB)”,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일정 서비스권 거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기관이 사실상 한 곳뿐인 영유아가 있는 읍면동을 접근성 취약 읍면동으로 정의하면 차량 5km 기준 접근성 취약 읍면동은 KTDB 1027개(26.6%), T map 1008개(26.1%)로 나타남(표 3).

- 차량 10km 기준으로 확대하면 접근성 취약 읍면동은 KTDB 287개(7.4%), T map 330개(8.5%)로 감소하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잔여적 취약성이 여전히 확인됨.
- 어린이집만을 기준으로 보면 T map 기준 접근성 취약 읍면동은 차량 5km 986개(25.5%), 10km 635개(16.5%)로 나타남. 이는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실질적 돌봄 공백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함.

〈표 3〉 서비스권 거리 임계값에 따른 접근성 취약 읍면동 수

(단위: 개, %)

구분	KTDB	T map	
	어린이집+유치원(전체 시설)	전체 시설	어린이집
서비스권 거리 750m	2,612(67.7)	-	-
서비스권 거리 1.5km	1,589(41.2)	1,537(39.8)	-
서비스권 거리 5km	1,027(26.6)	1,008(26.1)	986(25.5)
서비스권 거리 10km	287(7.4)	330(8.5)	635(16.5)
전체 읍면동 수	3,860	3,860	3,860

주: KTDB와 T map 자료 차이는 〈표 2〉 주석을 참고.

출처: “보육정보공개 API: OPEN API 상세(어린이집 DB)”,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04. 인구 감소 지역 시설 운영자와 부모 면담 결과

◆ 보육 공백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 초점집단면접(FGI) 주요 내용

- 통원 권역의 광역화: 가까운 시설이 폐원하면서 한 기관이 여러 면·리 단위 수요를 떠맡게 되어 차량 동선이 길어짐. 시설장에 따르면 하루 차량 주행거리가 100~130km에 달하고, 등원 차량 운행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운영비·인건비 부담: 원아 수 감소에도 고정비는 유지되며, 정부 지원 시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연령별 최소 배치 기준에서 1~2명만 미달해도 인건비 지원이 삭감되는 구조여서 저밀 지역 시설의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 교사 채용난과 정책 사각지대: 농어촌·도농 경계부 시설은 교사 지원자가 적고, 교사가 차량 동승·당직·잡무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구역상 ‘도시’이지만 통원 거리와 운영비 구조가 농어촌과 유사한 도농 경계부 시설은 현행 농어촌 특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 보육 공백 지역 부모 FGI 주요 내용

- 시간·금전 비용: 농어촌·도농 경계부 학부모는 셔틀 1시간 탑승, 편도 30~40분의 자차 라이딩, 출퇴근 동선 변경, 교통비 부담을 경험함. 차량 미보유, 무면허, 교대근무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정서 비용과 선택권 약화: 장시간 차량 탑승으로 영유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잦은 폐원·전원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또래 관계 형성이 훼손됨. 부모는 ‘원하는 곳을 고르는 선택권’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곳에 진입하는 접근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 돌봄 공백의 불평등: 이동 여력이 있는 가정은 보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조손·다문화·교대근무·농번기 농가 등 이주 여력이 낮은 가정은 폐원 시 곧바로 돌봄 공백에 직면함.

〈표 4〉 FGI에서 확인된 운영 부담과 이용 제약

구분	핵심 쟁점	주요 내용
시설장 인터뷰	통원권역 광역화	시설 폐원으로 한 기관이 여러 면·리 단위 수요를 담당하며 차량 운행 거리와 시간이 증가함.
	운영비·인건비 부담	원아 수 감소에도 고정비는 유지되고, 반 구성 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지원이 삭감됨.
	교사 채용난	외곽·농어촌 시설은 교사 지원자가 적고, 교사의 차량 동승·당직·잡무 부담이 증가함.
	정책 사각지대	도농 경계부는 실제 여건이 농어촌과 유사하나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제외됨.
	돌봄 공백 집중	조손·다문화·교대근무·농번기 가구 등 이주나 자차 이동이 어려운 가구가 먼저 배제됨.
학부모 인터뷰	시간·금전 비용	장거리 통원, 자차 의존, 교통비 부담, 출퇴근 동선 변경이 발생함.
	아동 피로·돌봄 단절	장시간 차량 탑승, 잦은 폐원·전원으로 아동의 피로와 적응 부담이 커짐.
	선택권 약화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기보다 도달 가능한 시설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05. 생활권 기반 보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첫째, 보육 접근권을 제도화하고 보육 공백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영유아 거주지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거리 안에서 최소 1곳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물리적 최저 기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정책상 최저 기준은 실제 이용자의 통원 부담과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시간 기준과 거리 기준을 병행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구 감소·아동 저밀 지역에서는 현행 영유아 1인당 균일 보육료·기관 보육료 방식이나 행정구역 기반 농어촌 특례를 넘어 수요 규모와 이동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 유연화가 필요함.

- 마을회관·주민센터·유희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소규모 분산형 보육, 교사 순회·파견형 서비스 등 다변화된 공급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접근성 취약 읍면동을 우선 대상으로 파견 보육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공간비·교통비를 공공이 부담하는 공공서비스 의무 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외에서도 인구가 분산된 지역에서는 가정형 보육, 소규모 보육, 순회·파견형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접근성 취약 지역에 맞는 운영 방식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최소필요지역’(보육수요·거리·지역여건상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제도의 ‘2개 반 이상 운영’ 요건이 1개 반으로 축소된 시설을 배제하는 역설을 낳고 있는 만큼(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연령별 최소 배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아동 저밀 지역에 대해서는 1개 반 운영, 다연령 혼합반 편성, 순회 교사 지원 등 반 편성과 교사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함.
 - 접근성 취약 읍면동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선정 문턱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셋째, 생활권 기반 보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접근성 기반 취약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특례, 도서벽지 분류는 도농 경계부, 대도시 외곽, 인구 감소 주거지 등 실질적 취약지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함. 이 연구의 시군구 유형화 결과에서 확인되듯 수축거점형(90개 시군구)과 이중감소형(47개 시군구)은 행정구역상 도시를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육 공백 위험을 안고 있음.
 - 생활권 기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분류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기보다 이동시간, 도로망 연결성, 대중교통 여건, 배후 수요 등을 종합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적·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통계지도: 유아 인구수(전체) 100m 격자** [데이터셋]. 국토정보플랫폼.
- 김보현. (2020. 1. 5.). 장수 산서면 어린이집 폐원 위기로 본 ‘농촌 보육 문제’: “농촌 산다는 이유로 보육 난민”…수요 적어 공공보육 사라지는 전북 농촌.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00105750313>
- 박영서, 진광찬. (2021. 8. 7.). “아이가 없어요” 27년 지킨 산골 유일 어린이집 ‘폐원 위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51700062>
- 서울특별시. (2023).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보도자료].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653호 (202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국공립 및 법인 등 어린이집별 지원**.
- 최혜진, 손재선, 김지민. (2025).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분석 방법

▶ 분석 자료

- 영유아 인구: 국토지리정보원 100m 격자 자료(6세 미만, 2016·2020·2024년 10월 기준). 2024년 전국 183만 4154명.
- 시설: 어린이집 2만 7989곳, 유치원 8310곳(총 3만 6299곳)의 좌표·정원·현원 자료.
- 도로망: T map(2023년) 도로망을 활용하고 KTDB 도로망으로 병행 검증함.

▶ 유일커버시설 식별 절차

- 시설별 서비스권을 도로망 기반 거리 임계값으로 산출한 뒤 특정 100m 격자를 단독으로 커버하는 시설을 유일커버시설로 식별함. 배후 수요가 크고 단독 서비스 비중이 낮은 시설은 인구 밀집에 따른 기계적 포착으로 보아 검증에서 제외함.

▶ 초점집단면접 개요

- 대상: 어린이집 원장 5개 그룹 20명(2025. 7. 8~7. 11), 학부모 4개 그룹 16명(2025. 8. 4~8. 7).
- 방법: 유일커버시설 목록에서 표집하고 지역 유형별로 임계값을 달리 적용함(대도시 1.5km, 중소도시 5~10km, 농어촌 10km). 이용 접근성, 시설 운영 안정성, 서비스 질, 정책 수요를 축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정량 분석 결과와 교차 검토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제2025-028호).

집필 최혜진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8172